

제4부

2023년도 업무계획

1 2023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

- 각종 미디어 융합현상 및 온라인 플랫폼 기반 콘텐츠의 여론형성기능 강세 추세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회 등 각계의 적극적 조정 주문
※ '2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김예지, 임오경, 유정주 위원 : 뉴스 전문 표방 유튜브 채널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적극적 피해구제에 나설 것 당부
- 언론중재법 통합 대안(본회의 계류 중)에 대한 미디어특위가 성과 없이 활동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미디어 관련 법체계 정비, 통합부처 설립 추진 움직임 및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 미디어 정책기조 방향을 면밀히 검토, 피해구제의 영역 확대를 위한 입법 노력 지속 필요
- 2022년도 조정처리 사건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함에 따라('21년 4,278건→'22년 3,175건) 향후 추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단순한 사건수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보다는 피해구제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비책 필요
- 소수자·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, '클릭 저널리즘'의 심화로 인한 선정적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신뢰도가 하락하는 현실에서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대에 대한 요구 증대
- 공공부문 예산 및 인원 감축 기조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의 필요성 절실, 또한 합리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

2 2023년도 위원회 핵심 과제

위원회 비전

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언론피해구제 제도

2023년도 핵심 과제

1	2
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조정제도 운용 내실화	기사심의의 실효성 제고

세부 추진 과제

1	피해구제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
2	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환경 조성
3	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권고 실효성 증진
4	선거기사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
5	온라인 동영상플랫폼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 입법 적극 추진
6	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



사무 처리의 효율화와 직원의 업무역량 증진으로
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 인프라 마련

3 세부 추진과제

가. 피해구제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

1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향상

▲ 피해구제방식의 다양화와 법정 처리기간 내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의 만족도 질적 향상 방안 검토, ▲이용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개선방안 모색, ▲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 유형화 (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방법 등 구체화해 내부 공유 후 실무 정착)

2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

조사관의 조정업무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법률적·학술적 직무 교육 프로그램 실시

※ 조사관 직무 사내교육프로그램 개설 TF(22.9.15.~ 22.10.14.) : 조사관 직무 프로그램 (기본/심화) 구성안 제사⇒ 주요 법률과 판례, 조정사례, 설득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실무능력 향상 도모

3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계데이터 유지관리

▲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방식, 보도량 등 실질적 피해구제 관련 데이터를 통계화해 보도문의 적정성 정도 검토 및 실무 적용 ▲자동소제기 사건의 판결결과와 위원회 조정결과를 비교·분석해 중재부 공유

나.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환경 조성

1 차별적 보도 모니터링 강화

사회적 약자,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

※ '22년 국정감사 시 문체위 김예지 위원 지적사항 : 장애차별적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권고 당부

2 언론사 대상 교육 확대

심의부서 및 교육전담 부서가 연계, 혐오표현 및 차별적 표현 관련 언론사 교육 확대

다.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권고 실효성 증진

1 심의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

▲유관 심의기구와의 협력 방안 마련, ▲심의기구별 심의 기준 및 공통 현안에 대한 간담회 등 추진

※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, 인터넷신문위원회, 광고자율심의기구 등과 업무협약, 현안 간담 및 공동 학술행사 등 검토

2 미디어 현장 피드백 취합

시정권고 대상 매체 등과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마련(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언론사 내부 조치 현황 파악 등)

라. 선거기사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

1 선거기사 시정요구제도 활성화 도모

▲위원회 홍보채널(블로그, 유튜브, 웹진 등)을 적극 활용해 시정요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, ▲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사 대상 교육 확대

2 심의인력 전문성 강화

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선심위 출범 전 심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 교육 실시

※ 선심위 출범 이전 채용기간을 확대해 별도 교육기간 확보

마.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 입법 적극 추진

1 시급한 개정안 입법 노력

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피해구제 영역으로 확대하고, 사건처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 증원 등 시급한 현안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적극 추진

※ '22.12.27. 김승수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(언론의 범주에 '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'를 포함)

2 22대 국회 개정안 준비

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024년도 22대 국회 개원 시에 발의될 수 있도록 문체부, 국회 등과 사전 준비

바.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

1 사무처 직제 및 인력 재배치 검토

▲직제 및 인력 재배치 검토를 통해 업무의 유기성 및 전문성 강화, ▲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사무처 인재상 수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, ▲위원회 비전 및 중장기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마련

※ 직제 및 업무 적정성 검토 3~4월, 규칙 개정 5월 시행 7월(안)

2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

▲명확한 업무목표 설정 및 성과 점검으로 직원의 직무만족도 향상, ▲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선결 과제 검토, ▲민원상담 직원, 부정적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심의원 등에 대한 직원 보호시스템 조성(반복적 민원 대처방안 마련 및 직원의 정신안정 지원 등), ▲심리환경 개선을 위한 심리실 증설 및 민원인 대기공간 확보

3 추진정책에 따른 각 부서 연계

각종 학술행사 및 발간, 교육, 보도자료, 홍보채널 활용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 증진

※ (예시) 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→보도자료 배포
→블로그, 웹진 등 위원회 운영 홍보채널 노출→학술지 및 계간지 등에 관련 글 공모
및 기사→공론화 및 여론형성→발의 추진

PRESS ARBITRATION COMMISSION
2022 ANNUAL REPORT

2022

언론중재위원회
연간보고서